<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대량실업 시대의 사회보장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량실업, 고실업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IMF 대란을 맞아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고 또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로 실업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실업수당이 신설돼 6개월동안 실직이전 급여의 60% 가량을 지급한다고 하나 6개월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이후의 생활수단이 마땅치 않고, 퇴직금도 직장경력이 10년이라면 모르되 10년미만의 경우에는 1년을 버티기에도 힘든 지경이다.

선진국들이 실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생계대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보장 자체가 전무하다고 보아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왜 이다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실업대책이 소홀한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같다.

IMF 대란 이전 우리나라는 후진국을 넘어 중진국 대열에 접어들었다고 인정받았고, 일부에서는 선진국에 진입한 양 거들먹거렸다. 이러한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세계 어디를 보아도 창피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사회보장체계가 미비한가!

그것은 아마도 공업화 과정에서 성장 지상주의가 낳은 저코스트 개념의 혼동, 사회적 인식 부족 그리고 국가세수 부족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 및 경직성 지출의 과다로 인하여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국가세수의 부족은 곧바로 사회보장비용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대하고, 경직성 재정부담을 대폭 감축하는 두가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첫째,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쪽으로 개편해야 하며, 탈세를 강력히 단속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존재이유를 박탈하는 중벌로 다스리고,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무거운 세율을 적용해「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퇴출시키는」사회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며, 국가사회의 6적으로 일컬어지는 국회의원 및 정당간부, 관료 및 준관료집단-고위·중하위를 가릴 것 없고 국영기업까지를 포함하는 권력집단,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및 약사, 언론인, 교수 및 교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및 탈세 추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고, 불공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화감 및 박탈감을 치유해 국민일반의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보험을 통폐합하고 퇴직금제도를 폐지해 근로소득의 10~30%를 근로복지세로 일괄징수거나 근로소득세율 5~15% 및 사회보장보험료 5~15%를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율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난다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각종 판공비의 폐지도 당연하다.

둘째, 경직성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대폭 감축하고, 관료집단의 대대적인 사정을 통한 인원감축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청와대 및 중앙행정조직을 감축했으나 크게 불충분하다. 행정조직은 개편안보다 30%정도, 행정공무원은 50%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서를 보조한다는 구실로 관료들의 퇴출창구화되고 있는 각종 연구소 등 관변조직은 80% 이상 대부분을 폐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제개혁 및 관료조직·집단의 감축·혁파없이는 그 어떠한 개혁도, 사회보장제도의 정착도 불가능하다.

<화학저널 1998/3/9>